

해양경찰청예규 제 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해양경찰청장

##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1. 개정이유

어선재해 시 어민피해 경감을 위한 방제비용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방제현장 상황에 맞게 비용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수정·보완함.

### 2. 주요내용

- 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구체화(제2조)
- 나. 어선재해 시 20톤미만 소형어선 방제비용 경감 기준 마련(제4조의2)
- 다. 분임수입징수관과 방제과장의 행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분(제8조)
- 라.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절차 고지사항 반영(제8조제2항)
- 마. 일부 자구 수정·보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등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
2. "배출방지조치"란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방제의무자와 법 제68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 나.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
4. "현물징수"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경우에 소모·멸실된 기계·기구 및 물품 등을 동일규격,

동일수량으로 금전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방제세력"이란 해양오염방제, 잔존유 이적, 파공봉쇄 등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에 적용한다.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직접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2. 선박·시설의 소유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
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 ① 해양경찰관서에서 방제조치등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부담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제비용 산정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및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하게 한 경우,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2(방제비용의 감면)** ① 해양경찰서장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방제조치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등의 비용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조치 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선박, 항공기, 기계·기구의 운항경비 및 인건비
2.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방제비용 산출 및 현물납부 사전고지)**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등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 금액을 산출하여 제6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1. 소송 등으로 인해 방제비용 확정기 장기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및 보험사와의 협의 등이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

에게 부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제비용 납부의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오·훼손 및 멸실된 물품으로 인해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비용 산출 전이라도 선주 및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현물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물 납부된 물품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에 대해 납부의무자가 현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현금부담액으로 하여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공단과 민간방제세력의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비용

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 제5조의2 삭제

**제6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 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위원회를 둔다.

1. 해당 해양오염사고와 방제비용과의 연관성 및 실제 발생한 비용 산정
2. 해당 해양오염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서 발생한 비용 여부 확인
3. 방제비용 청구항목별 증명서류 및 근거자료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제비용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비용 추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소송으로 법원에서 방제비용을 확정할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보험·법무·방제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 다만, 일부 분야의 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분야의 근무 경력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담당 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6조의2(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재청취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할 경우에 제6조제1항을 고려하여 방제비용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⑧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하며, 위원 또는 전문가 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기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한다.

⑨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의3(방제비용 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각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하 "방제과장"이라 한다)은 납

부의무자가 현물을 납부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
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

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8조(방제비용의 현금징수)**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

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제9조(독촉 등)**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방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최고 등 비용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에 조치사항을 입력하여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체납처분)**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 압류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방제비용을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결손처분)**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을 경우
2. 소멸시효의 완성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가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2조(방제비용채납정리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의 채납정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방제비용채납정리위원회(이하 "채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채납정리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위촉된 위원은 채납정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지 않는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세무 또는 법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

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

⑤ 간사는 경리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의2(방제비용체납정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체납정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재청취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

④ 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체납정리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체납정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한다.

⑧ 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⑨ 위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납부의무자"란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선박의 소유자·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및 오염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와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을 말한다.  4. "현물징수"란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 <u>방제조치등</u> "이라 한다)를 하였을 경우에 소모·멸실된 기계·기구 및 물품 등을 동일규격, 동일수량으로 금전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납부의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방제의무자와 법 제68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나.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한 사람 4. ----- ----- " <u>방제조치등</u> " ----- ----- ----- -----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 ----- -----.

<p>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에서 직접 <u>방제조치</u> 등을 한 경우</p> <p>2. 선박·시설의 <u>소유자</u> 및 해양 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 경찰관서의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 등을 한 경우</p> <p>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u>방 제조치</u> 등을 한 경우</p> <p>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p> <p>① 해양경찰관서에서 <u>방제조치</u> 등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부 담시키는 비용부담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 다.</p> <p>②·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및 민 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u>방제조 치</u> 등을 하게 한 경우, 방제비용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p>	<p>1. ----- ----- ----- <u>방제조치등</u>----- --</p> <p>2. ----- <u>소유자</u>, ----- ----- ----- ----- -----</p> <p>3. ----- ----- <u>방 제조치등</u>-----</p> <p>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p> <p>① ----- <u>방제조치등</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방제조치 등</u>----- ----- -----</p>
--	--

다.

<신 설>

제5조(방제비용 산출 및 현물납부  
사전고지)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등이 종료된 날부터 9  
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추산금액을 산출하여  
제6조의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

제4조의2(방제비용의 감면) ① 해  
양경찰서장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업경영  
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  
의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에 대  
하여 방제조치등의 비용을 감면  
할 수 있다. 단, 기름 등 오염물  
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등의  
비용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조치 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선박, 항공기, 기계·기구  
의 연료비 및 인건비
2.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방제비용 산출 및 현물납부  
사전고지) ① -----  
방제조치등-----  
-----  
-----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현금 부담액으로 하여 방제비용 추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공단과 민간 방제세력의 방제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제6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① 방제비용 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신설>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4호서식-----  
-----  
-----  
-----  
-----.

⑦ -----  
----- 방제조치등-----  
-----  
-----

제6조(방제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

4. (생략)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⑥ 간사는 담당 계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6조의2(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할 경우에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고려하여 방제비용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제8조(방제비용의 현금징수)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액을 별지 제3호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제1항에도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 -----  
-----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6조제1항을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방제비용의 현금징수) ① -  
-----  
-----  
-----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해야 한다.

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세입금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방제비용 납부통지서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12조(방제비용채납정리위원회

서식-----  
-----  
-----  
-----  
-----  
-----  
-----.

② -----  
-----  
-----  
-----  
-----  
----- 결정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

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  
-----  
-----  
-----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 -----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

제12조(방제비용채납정리위원회

<p>구성) ① ~ 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u>위원회</u>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 정 또는 위촉된 위원은 <u>위원회</u> 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 며, 별도의 위촉장 등은 수여하 지 않는다.</p> <p>1. 2. (생략)</p> <p>⑤ (생략)</p> <p>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 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1년 1월 1일</u>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체납정리위원</u> <u>회</u> ----- ----- -----. ----- <u>체납정</u> <u>리위원회</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재검토기한) ----- ----- ----- ----- <u>2023년 1월 1일</u> - ----- ----- <u>12월 31일</u>----- ----- -----.</p>
--	--